

“코드 맞는 ‘정책형’ 인사 우선”

■새총리 누가 되나

내달 6일 이후로 예상되는 한명숙 총리의 퇴진에 따라 새로 지명될 후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임기 마지막 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 이른바 ‘관리형’ 총리를 택하느냐, 아니면 참여정부 개혁 정책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일 ‘정책형’ 총리를 중용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추론에서다.

◇역대 임기말 총리=임기말 예외 없이 여당을 탈당했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정치적·정책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원로급 명망가형 내지 행정관리형 인물을 총리로 기용했다. 임기말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관리형’ 콘셉트를 택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9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현승중 당시

노대통령 임기말 ‘관리형 총리’ 배제할 듯 김우식·이규성·이병완·전운철 등 물망

한라대 총장을 ‘중립내각’ 총리로, 김 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말 마지막 총리로 고 건 당시 명지대 총장을 각각 기용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석수 전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말 총리로 선택했다.

◇정책형 선택 가능성=그러나 노 대통령은 비록 여당 탈당이라는 전철을 밟게 되지만 “임기말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여러분이 귀찮고 힘들어 할 만큼 국정을 또 박포박 쟁겨나가겠다”고까지 언급했던 만큼 새 총리의 콘셉트가 ‘관리형’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같은 레임덕을 초

래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는 연초 개헌안 발의를 천명하면서도 “때문에 새 총리도 단 순히 관리형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총리 후보군=이 같은 콘셉트에 따라서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이규성 전 재정부장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전운철 감사원장,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 부총리는 현재 내각에 포함된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2004.2~2005.8)으로 1년 6개월 재임하면서 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폭넓은 스텝 트림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병완 비서실장도 후보군중 한명

으로 거론되는 것은 노 대통령의 뜻에 정통한 이 실장을 내각의 전면에 배치해 내각을 통합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이다.

전 감사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줄곧 감사원장을 맡아와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덕수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대행 등 요직을 거쳤다.

이규성 전 장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으며 정책 논의과정에 참여한 인연이 있다.

◇지역인배 변수 될까=일각에서는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두 축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호남출신 총리를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 ‘충청도 총리론’ ‘영남 총리론’ 등이 회자하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충남 공주 출신인 김우식 부총리나 충남 논산 출신인 이규성 전 장관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점치는 시각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5>전문대, 더 전문화 돼라

제살 깎아먹는 ‘덩치 키우기’ 다이어트 특성화만이 살 길

전문화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세워진 광주·전남 지역 전문대학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전문화, 특성화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전문대학의 학과(전공) 현황을 보면 한마디로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한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 명칭은 보건대학이지만, 간호·보건계열 외에 공업·예능·사회실무계열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보건대학 역시 사회복지·유아교육·관광외국어과가 있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들 역시 취업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전문대학 학교소재지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88.8%로 전국 평균 84.2%를 웃돌았으나 정규직 취업률은 61.6%로 전국 평균 67.1%에 못미쳤다. 또 취업자 8천714명 중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잡은 사람은 6천247명(71.7%)이었고 나머지 2천467명(28.3%)은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했다. 전남 역시 8천985명의 취업자 중 3천566명(34%)이 전공과 다른 직장을 잡았다.

산업인력 양성 ‘제기능’ 못해

신입생 충원을 갈수록 떨어져

사회복지과(전공)와 아동복지과(전공), 유아교육과도 학교의 특성과 상관없이 많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과(전공)의 경우 4~5년 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붐이 일면서 거의 모든 전문대학에서 개설됐다.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이 공개예에 사회복지사 관련학과를 개설해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편법까지 동원해 학생 충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골 노인네 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전문대학들이 전문화·특성화를 소홀히 한 채 규모 확장에 나서는 동안 4년제 일반대학들이 전문대학 개설 학과와 유사한 학과를 잇따라 만들며 전문대학의 고유 영역을 위협해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에 개설된 전문대학 유사학과는 광주여대 실버케어학과, 남부대 인터넷어학과, 동신대 방사선학과·작업치료학과·실용음악학과, 초당대 치위생학과 등이다.

이는 충원을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0.7%로 지난 2001년의 99.7%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남지역 역시 지난 2001년 91%에서 지난해 88%로 감소했다.

물론 전문대학의 양적 팽창은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정책 실시 등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을 또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모를 키워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4년제 대학과 차별화 시급

전문대학이 무분별한 학과 개설을 중단하고 전문대학의 역할에 걸맞은 대학 특성화에 힘을 쏟아야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한 관계자는 “출산을 저하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화·특성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노대통령 내일 당적 정리

당원들에 드리는 편지도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를 위한 탈당계를 당에 제출하고, 이날 우리당 당원 신분으로서 당적을 정리하는 심경을 전하는 ‘당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노 대통령이 28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할 뒤 당적 정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만찬간담회에서 “당적을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아직은 당원 신분인 만큼 당원들에게 한번쯤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 이날 안으로 당적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초 이르면 26일 중으로 편지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27일 예정된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 준비로 편지글을 마무리하지 못해 공개 일자를 미뤘고, 이날 오후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는 인터넷 매체 회견 준비를 위한 점검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6일 외교교통상부에서 개막된 '2007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신문 권력 창출자 되려해 민주주의 위협”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해”라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한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언론 자유’가 언론사의 이익을 지키고 정파

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 ‘언론 사주의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자료에서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정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불공정·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양화된 정보화시대에 언론도 바뀌고 변해야 생존할 수 있

다”며 “참여정부가 언론 탓만 한다고 하기 전에 더 이상 ‘세상만사를 정부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언급,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도 지난 몇 년 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에서 오신 대사들은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원대학 자동차 학과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조립작업을 실습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종합상점 중국/일본

- 상해/장가계/소주 3일 639,000
- 상해/장가계/소주 4일 790,000
- 상해/장가계/소주 4일 499,000
- 상해/장가계/소주 3일 829,000
- 상해/장가계/소주 4일 739,000
- 상해/장가계/소주 4일 279,000

복합형 아파트

- 1. 111,000
- 2. 111,000
- 3. 111,000
- 4. 111,000

인생총합시동

1	259,000
2	419,000
3	639,000
4	829,000
5	1,019,000
6	1,209,000
7	1,399,000
8	1,589,000
9	1,779,000
10	1,969,000
11	2,159,000
12	2,349,000
13	2,539,000
14	2,729,000
15	2,919,000
16	3,109,000
17	3,299,000
18	3,489,000
19	3,679,000
20	3,869,000
21	4,059,000
22	4,249,000
23	4,439,000
24	4,629,000
25	4,819,000
26	5,009,000
27	5,199,000
28	5,389,000
29	5,579,000
30	5,769,000
31	5,959,000
32	6,149,000
33	6,339,000
34	6,529,000
35	6,719,000
36	6,909,000
37	7,099,000
38	7,289,000
39	7,479,000
40	7,669,000
41	7,859,000
42	8,049,000
43	8,239,000
44	8,429,000
45	8,619,000
46	8,809,000
47	8,999,000
48	9,189,000
49	9,379,000
50	9,569,000
51	9,759,000
52	9,949,000
53	10,139,000
54	10,329,000
55	10,519,000
56	10,709,000
57	10,899,000
58	11,089,000
59	11,279,000
60	11,469,000
61	11,659,000
62	11,849,000
63	12,039,000
64	12,229,000
65	12,419,000
66	12,609,000
67	12,799,000
68	12,989,000
69	13,179,000
70	13,369,000
71	13,559,000
72	13,749,000
73	13,939,000
74	14,129,000
75	14,319,000
76	14,509,000
77	14,699,000
78	14,889,000
79	15,079,000
80	15,269,000
81	15,459,000
82	15,649,000
83	15,839,000
84	16,029,000
85	16,219,000
86	16,409,000
87	16,599,000
88	16,789,000
89	16,979,000
90	17,169,000
91	17,359,000
92	17,549,000
93	17,739,000
94	17,929,000
95	18,119,000
96	18,309,000
97	18,499,000
98	18,689,000
99	18,879,000
100	19,069,000